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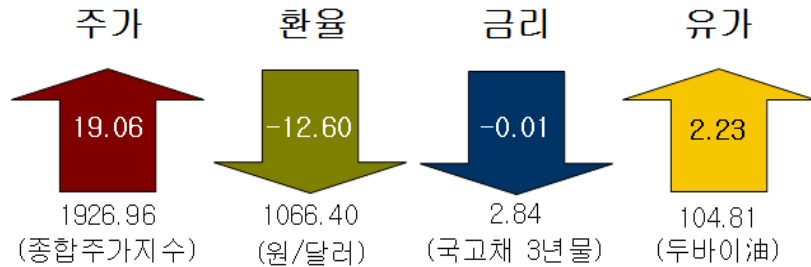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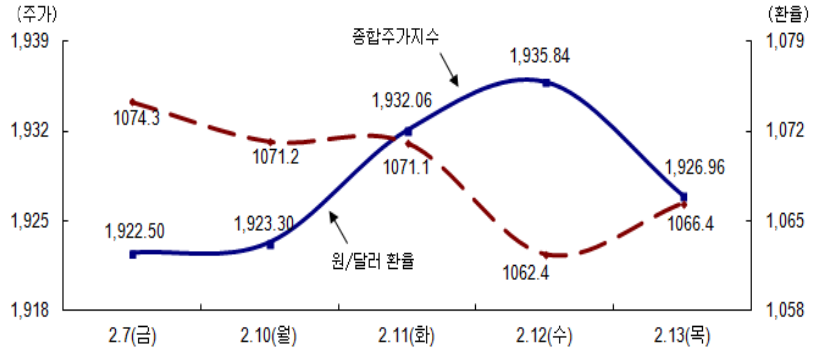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週間 主要 經濟 指標 (2.7~2.13)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3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2072-6230, swhan@hri.co.kr)
 □ 경제연구본부 : 김 광 석 선 임 연 구 원 (2072-6215, gskim@hri.co.kr)

Executive Summary

□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 가계부채 1,000조와 소득계층별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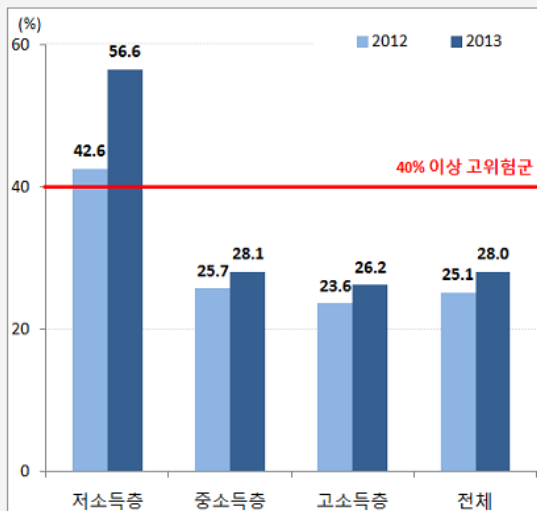
(가계부채 1,000조 시대) 가계부채 규모는 2013년 3/4분기 약 992조원을 기록하였고, 2013년 연말 1,00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2004년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어, 가계의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 (가계부채 부담의 소득계층별 차이) 가계부채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부담은 중·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게 집중되고 있다. 2013년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채무상환비율은 56.6%로,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이 매우 높아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중소득층 28.1%와 고소득층 26.2%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 소득계층별 금융대출가구의 가계부채 특징

첫째,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하고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되고 있다. 저소득층의 금융대출은 2012~2013년 동안 크게 증가한 반면, 가처분소득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채무불이행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이 크게 확대되었다.

둘째, 고소득층은 주로 원금을 상환하나, 저소득층은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저소득층은 원금상환보다 이자지급이 가중되고 있다. 반면, 중·고소득층은 많은 원금상환으로 디레버리징(deleveraging)하고 있고 부채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소득계층별 채무상환비율 현황 >



< 소득계층별 원리금상환액 >

		(만원, %)		
		2012	2013	증감률
저소득층	원리금상환액	398	500	25.6
	이자지급	129	186	44.2
	원금상환	268	314	17.2
중소득층	원리금상환액	771	891	15.6
	이자지급	238	244	2.5
	원금상환	533	646	21.2
고소득층	원리금상환액	1,738	2,002	15.2
	이자지급	607	584	-3.8
	원금상환	1,131	1,418	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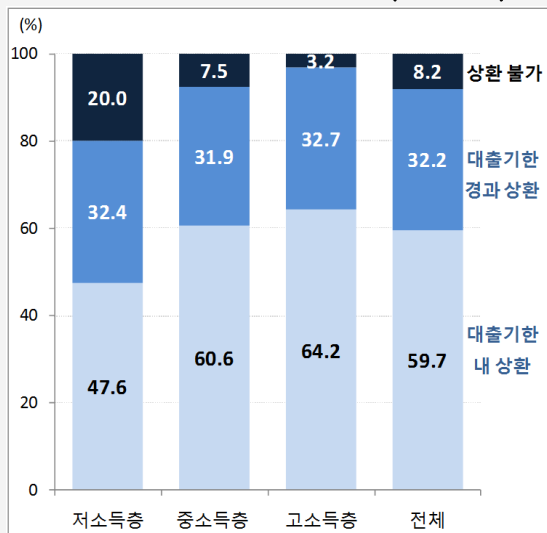
셋째, 저소득층은 근로형태가 불안정하고 소득 증가도 미비하다. 중소득층 이상은 주로 안정적 일자리를 보유하나,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는 주로 불안정한 형태로 근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가구소득 증가폭이 중·고소득층에 비해 가장 낮고, 특히 이전소득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넷째, 고소득층은 자금유통차질로, 저소득층은 소득감소로 인해 연체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전 계층에서 원리금 연체가구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연체 원인에는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고소득층은 주로 자금유통차질로 인한 원리금 연체가 가장 많고,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의 경우 소득감소가 주요한 원인이다.

다섯째,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생계에 큰 부담이 되고, 부채상환이 곤란한 상황이다.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경우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이 생계에 주는 부담이 매우 높고, 고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느끼고 있다. 저소득층의 과반 이상이 대출기한 내 상환이 불가능하여 연체율이 증가할 전망이다.

여섯째, 고소득층은 부동산 구입을, 저소득층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미래 부채가 증가할 전망이다. 미래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믿고 있는 가구 중 저소득층은 생활비(52.1%)와 교육비(26.1%)를 위한 '생계형 대출'이 대부분이고, 고소득층은 부동산구입(35.2%)이 가장 높다.

< 소득계층별 상환가능성(2013년) >



< 소득계층별 미래부채 증가 요인 >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부동산 구입	5.1	15.2	35.2	16.9
사업자금	3.7	9.2	13.5	8.9
생활비	52.1	37.3	15.6	36.3
교육비	26.1	21.3	15.4	21.2
부채상환	9.0	11.0	7.1	9.9
기타	4.0	5.9	13.3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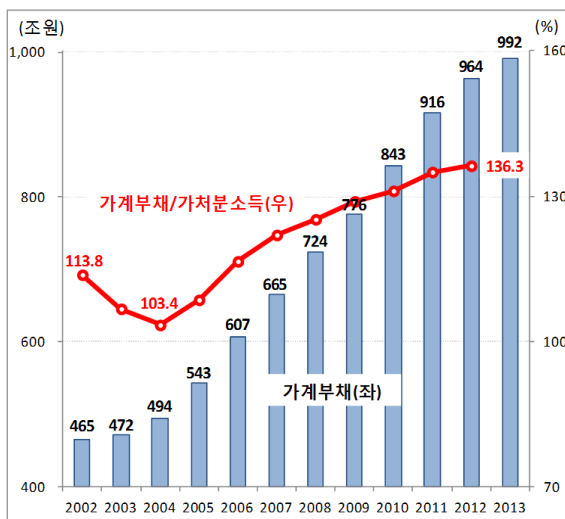
■ 시사점

소득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향상, 서민금융,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과 같은 3각축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중소득층의 경우 소득향상 대책과 재무건전성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소득층의 부채부담은 축소되지만,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대출은 서서히 줄일 필요가 있다.

1. 가계부채 1,000조 시대

- 2013년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초과할 전망이다 가운데, 소득계층별 부채 구조도 상당한 변화 예상
 - 가계부채 규모는 가계신용 기준으로 2013년 3/4분기 약 992조원을 기록, 2013년 말 1,000조원 돌파 확실시
 - 2013년 9월 이후 11월까지의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분 9.1조원을 합하면 이미 1,000조원을 초과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2004년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어, 가계의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음
 - 가계부채의 부담은 중·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집중¹⁾
 - 2013년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채무상환비율은 56.6%로,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이 중·고소득층보다 매우 높음
 -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비율은 중소득층 28.1%와 고소득층 26.2%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아 소득계층별 가계부채 문제 해결책이 모색될 필요
- (연구목적) 소득계층별로 부채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함으로써,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사점 제언
 - 소득계층별 가계부채의 세부특징, 대출 증가 요인, 연체 증가 요인 등 분석

< 가계부채 규모 추이 >



자료 : 한국은행(가계신용, 국민계정).
주 : 2013년은 3/4분기말 가계신용 기준.

< 금융대출가구의 소득계층별 채무상환비율(2013년) >
(만원, %)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가구당 년가처분소득 (A)	884	3,170	7,634	4,013
가구당 년원리금상환액 (B)	500	891	2,002	1,126
가구당 채무상환비율 (B/A)	56.6	28.1	26.2	28.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1) 현대경제연구원(2013.3),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경제주평 13-11.

2. 소득계층별 금융대출가구의 가계부채 특징

(1) 정의 및 분석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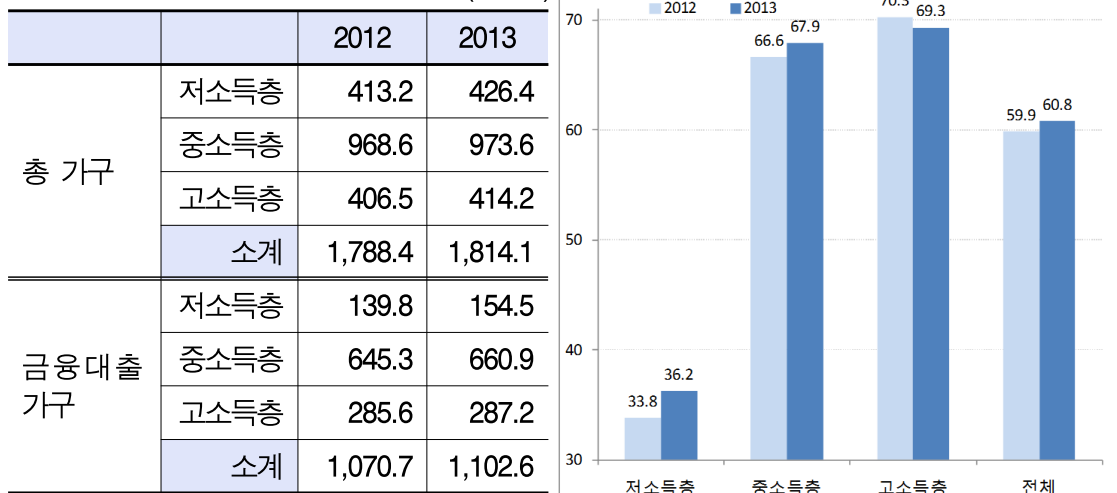
○ (소득계층 분류) 가구원수를 고려한 **균등화 가처분소득**($\frac{\text{가처분소득}}{\sqrt{\text{가구원수}}}$)을 기준으로 소득계층 분류(OECD 및 한국 통계청 기준과 동일)

- 저소득층 : 균등화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
- 중소득층 : 균등화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상 150% 미만
- 고소득층 : 균등화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상

○ (분석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신용카드대출, 외상·할부가 있는 금융대출가구

- 본 연구의 목적은 소득계층별 가계부채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금융대출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
- 추계 결과, 금융대출가구 비중은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을 중심으로 확대
 - 저소득층의 금융대출가구 비중은 2012~2013년 동안 33.8%(140만 가구)에서 36.2%(155만 가구)로 확대
 - 중소득층의 비중은 66.6%(645만 가구)에서 67.9%(661만 가구)로 확대
 - 고소득층의 비중은 70.2%(286만 가구)에서 69.3%(287만 가구)로 축소

< 2012-2013 소득계층별 가구 현황 > < 소득계층별 금융대출가구 비중 >
(만가구)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2) 소득계층별 가계부채의 특징

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하고, 채무상환능력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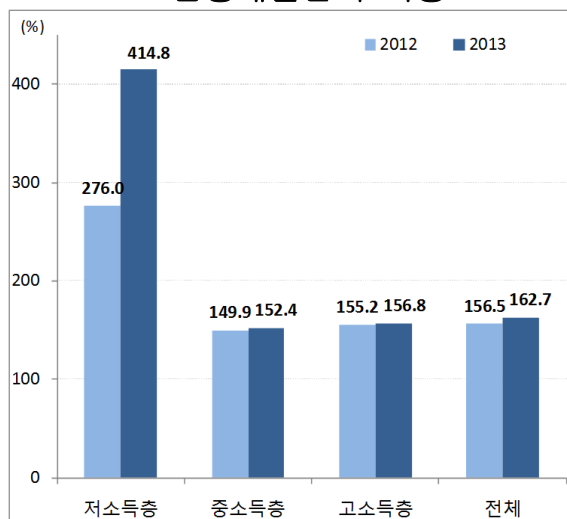
○ 채무상환능력의 저량(stock) 측면 :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대출잔액

- 저소득층 : 금융대출잔액이 급증하는 반면,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면서 채무상환능력 크게 악화
 - 금융대출잔액 :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는 2012년 2,578만원에서 2013년 3,667만원으로 42.2% 증가
 - 年가처분소득 : 같은 기간 934만원에서 884만원으로 오히려 감소(-5.4%)
 - 年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대출잔액²⁾ : 2012~2013년 동안 276.0%에서 414.8%로 크게 증가하여, 가처분소득을 모두 원금상환에 사용해도 4년 이상 소요
 - 저소득층은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창업자금 마련을 위한 부채와 임시·일용근로자 및 무직자의 생활비 마련을 위한 부채가 많이 차지함
- 중·고소득층 : 금융대출잔액과 가처분소득이 비슷한 속도로 증가
 - 2012~2013년 동안 중소득층과 고소득층 금융대출가구는 年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대출잔액이 각각 2.5%p, 1.6%p 소폭 증가
 -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중산층의 경우 경기위축에 따른 '사업소득 감소'가, 고소득층의 경우 '부동산투자 수익 하락'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소득계층별 부채 및 소득³⁾ >

	(만원, %)		
	2012 (만원)	2013 (만원)	증감률 (%)
금융대출잔액	6,101	6,528	7.0
저소득층	2,578	3,667	42.2
중소득층	4,501	4,832	7.4
고소득층	11,441	11,970	4.6
年가처분소득	3,898	4,013	2.9
저소득층	934	884	-5.4
중소득층	3,003	3,170	5.6
고소득층	7,370	7,634	3.6

< 소득계층별 年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대출잔액 비중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2) 저량(stock) 측면에서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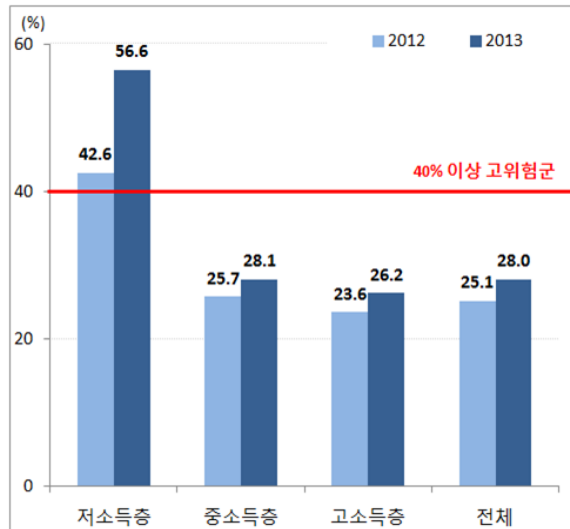
○ 채무상환능력의 유량(flow) 측면 : 채무상환비율

- 저소득층 : 원리금상환액이 급증하면서 채무상환비율이 크게 상승하여 '고 위험군' 확대
 - 원리금상환액 :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는 2012년 398만원에서 2013년 500만원으로 25.6% 증가하여, 증가속도가 중·고소득층에 비해 가장 빠름
 - 채무상환비율(DSR; $\frac{\text{원리금상환액}}{\text{가처분소득}}$)⁴⁾ : 42.6%에서 56.6%로 14.0%p 상승하여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채무불이행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확대
 - 저소득층의 경우, 주어진 가처분소득에 비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부담이 가중되어 부채를 확대하는 악순환 구조 형성
- 중·고소득층 : 원리금상환액이 소폭 증가하고, 채무상환비율도 상승폭 미미
 - 원리금상환액 : 2012~2013년 동안 중소득층과 고소득층 금융대출가구는 각각 15.6%, 15.2% 증가
 - 채무상환비율 :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이 각각 2.4%p, 2.5%p 상승
 - 중·고소득층의 경우, 원리금상환액이 소폭 증가였지만 가처분소득도 크게 증가하여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음

< 소득계층별 원리금상환액 >

	(만원, %)		
	2012 (만원)	2013 (만원)	증감률 (%)
저소득층	398	500	25.6
중소득층	771	891	15.6
고소득층	1,738	2,002	15.2
전체	980	1,126	14.9

< 소득계층별 채무상환비율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3) 각 소득계층별 부채-소득 구조의 세부내용은 '[별첨] 소득계층별 금융대출가구의 자산·부채·소득 구조' 참조.
 4) 유량(flow) 측면에서 부채 상환을 위한 현금조달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로, 개별 가구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가구의 생계부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국제 금융기관들은 통상적으로 채무상환비율이 40%를 넘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한국은행은 '과다채무가구'로 정의.

② 고소득층은 주로 원금을 상환하나 저소득층은 이자를 지급

- 저소득층 : 원금상환보다 이자지급 가중

- 이자지급 : 2012년~2013년 동안 이자지급액이 129만원에서 186만원으로 매우 크게 증가하여, 증가율이 44.2% 수준
- 원금상환 : 같은 기간 원금상환의 증가율은 17.2%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가처분소득 대비 이자지급 비중 : 2012년 13.8%에서 2013년 21.0%로 급증
- 소득감소로 인해, 많은 이자를 지불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한 부채가 증가
- 저소득층은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이 증가하면서 '저소득 → 생계형 가계 대출 증가 → 원리금 부담 증가 → 가처분소득 감소'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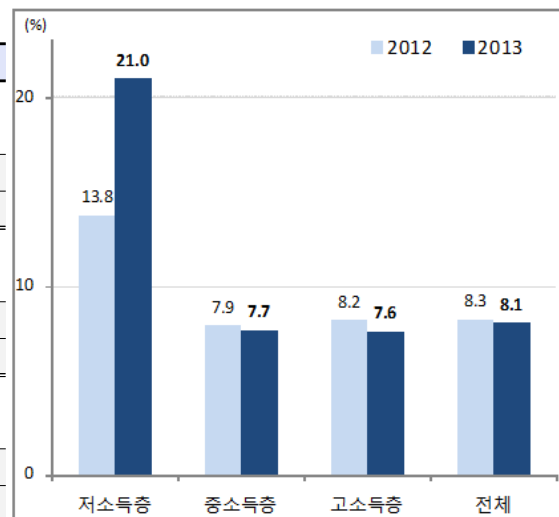
- 중·고소득층 : 많은 원금상환으로 디레버리징(deleveraging)

- 이자지급 : 2012년~2013년 동안 중소득층의 이자지급액 증감률은 2.5%에 불과하고, 고소득층은 -3.8%로 오히려 감소
- 원금상환 : 같은 기간 원금상환 증가율은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이 각각 21.2%, 25.4%로 매우 빠르게 증가
- 가처분소득 대비 이자지급 비중 : 2012년~2013년 동안 중소득층은 7.9%에서 7.7%로 하락하고, 고소득층도 8.2%에서 7.6%로 하락
- 중·고소득층은 채무상환비율이 상승하였을지라도, 원리금상환액에서 원금상환액 비중이 높아,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향후 가계부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

< 소득계층별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

		(만원, %)		
		2012	2013	증감률
저 소 득 층	年원리금상환액	398	500	25.6
	이자지급	129	186	44.2
	원금상환	268	314	17.2
중 소 득 층	年원리금상환액	771	891	15.6
	이자지급	238	244	2.5
	원금상환	533	646	21.2
고 소 득 층	年원리금상환액	1,738	2,002	15.2
	이자지급	607	584	-3.8
	원금상환	1,131	1,418	25.4

< 소득계층별 가처분소득 대비 이자지급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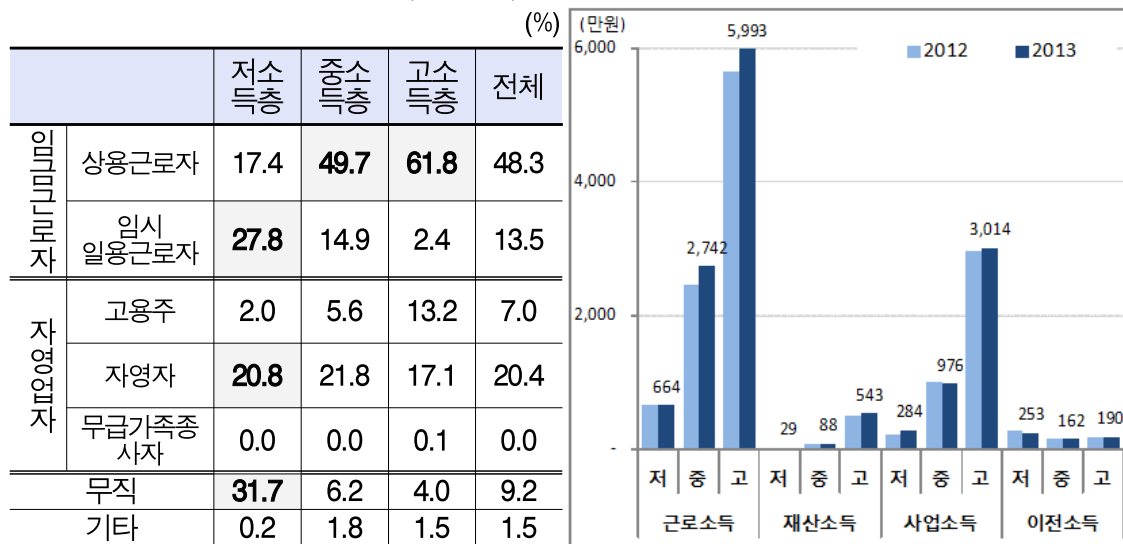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③ 저소득층은 근로소득의 증가폭도 최저인 가운데 이전소득 감소

- 중소득층 이상은 주로 안정적 일자리를 보유하나,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는 주로 불안정한 형태로 근로
 - 저소득층 : 31.7%가 무직자로 근로소득 절대액이 매우 부족하고, 임시·일용근로자가 27.8%, 자영자⁵⁾가 20.8%로 근로형태가 불안정함
 - 중·고소득층 : 중소득층 가구는 무직자나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낮고, 상용근로자 비중이 높음. 고소득층의 대부분(61.8%)은 상용근로자 형태로 근로하고, 고용주 비중도 가장 높아 안정성 및 수익성이 높음
-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가구소득 증가폭이 중·고소득층에 비해 가장 낮고, 특히 이전소득⁶⁾은 감소
 - 저소득층 : 2012~2013년 동안 근로소득은 651→664만원으로 증가폭이 미미하고, 이전소득의 경우 283→253만원으로 크게 감소
 - 중·고소득층 : 근로소득은 중소득층이 2,470→2,742만원, 고소득층이 5,653→5,993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전소득도 각각 소폭 증가
 -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절대액 기준으로도 크게 낮은 가운데 증가폭도 미미하고, 이전소득은 크게 감소하고 있어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소득계층별 근로형태 현황(2013년) > < 소득계층별 경상소득 세부 내역⁷⁾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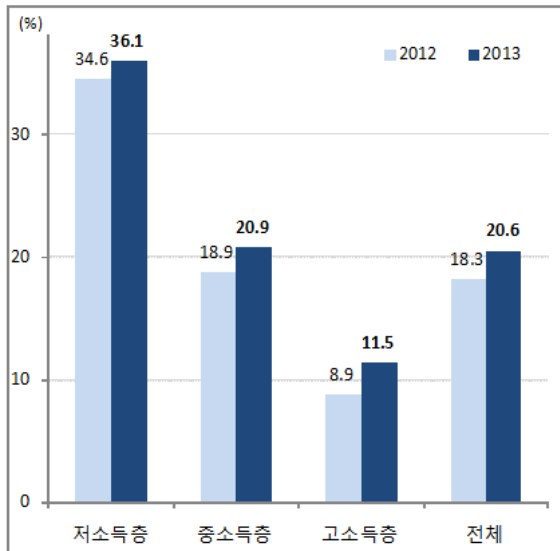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5) 자영업자 중에서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 비교적 큰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에 비하여 자영자는 폐업률도 높고, 수익성도 열악함.
 6) 이전소득(transfer income)은 생산 활동에 공헌한 대가로 지급된 소득이 아니라 정부 또는 기업이 반대급여 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며,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으로 분류된다. 공적 이전소득은 공적 연금, 기초노령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애수당 등과 같이 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소득을 말하며, 사적 이전소득은 친족이나 후원자로부터 3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받은 금품을 일컫음.
 7) 각 소득계층별 소득구조의 세부내용은 '[별첨] 소득계층별 금융대출가구의 자산·부채·소득 구조' 참조.

④ 고소득층은 자금유통차질로, 저소득층은 소득감소로 연체가구 증가

- 연체가구 현황 : 전 계층에서 원리금 연체가구 비중이 상승
 - 저소득층 : 원리금 연체 경험이 있는 금융대출가구는 2012년 48만 가구 (34.6%)에서 2013년 56만 가구(36.1%)로 증가
 - 중소득층 : 연체가구는 2012년 122만 가구(18.9%)에서 2013년 138만 가구 (20.9%)로 증가
 - 고소득층 : 연체가구는 2012년 25만 가구(8.9%)에서 2013년 33만 가구 (11.5%)로 증가
 - 저소득층의 경우, '가계부채 부담 증가 → 연체 확대 → 이자지급비용 가중 → 소득격차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⁸⁾
- 연체 원인 : 고소득층은 주로 자금유통차질⁹⁾로 인한 원리금 연체가 가장 많고,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의 경우 소득감소가 주요한 원인임
 - 저소득층 : 연체가구의 43.9%가 소득감소에 따른 것임
 - 중소득층 : 연체가구의 35.6%가 소득감소, 31.8%가 자금유통 차질에 원인
 - 고소득층 : 연체가구의 40.2%가 자금유통 차질에 원인
 - 저소득층의 경우, 무직자나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여 소득감소에 따른 연체 증가 등의 가계부채 문제 야기

< 소득계층별 원리금 연체 경험 비중 > < 소득계층별 원리금 연체 원인(2013년) > (%)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원리금 상환부담 상승	24.6	18.5	23.0	20.8
자금유통 차질	22.5	31.8	40.2	30.3
소득감소	43.9	35.6	21.5	36.1
가계지출 증가	7.5	11.4	13.3	10.6
기타	1.5	2.7	2.1	2.3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주 : 연체경험가구는 지난 1년간 연체 경험이 있는 가구로서, 납부기일 착오로 인한 연체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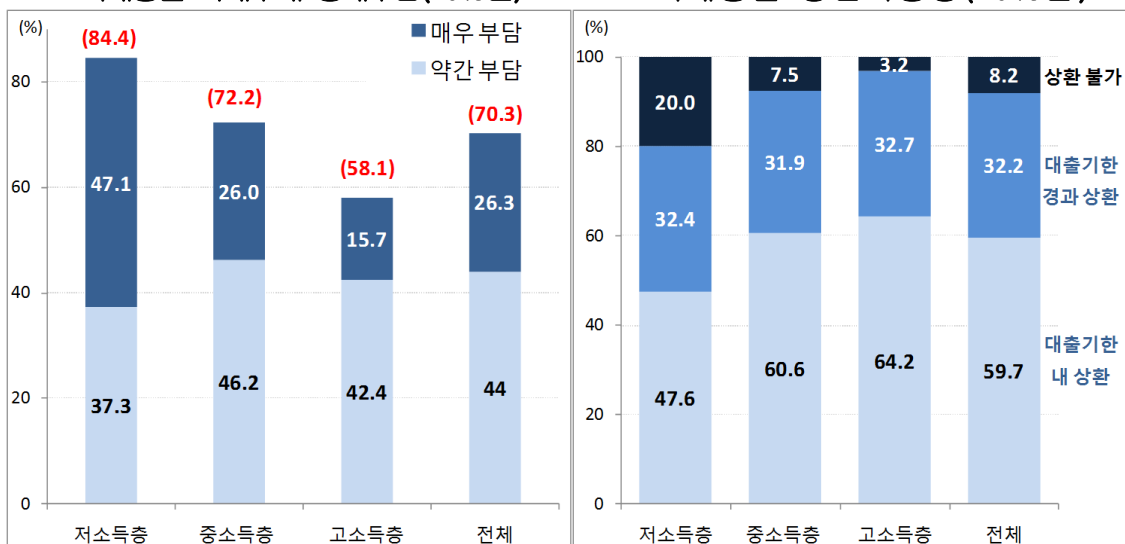
8) 은행 대출이자 연체시 대출잔액에 지연배상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연체가구의 경우 이자 부담이 가중됨.
 9) 체납자가 원리금 상환을 위한 계획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사업자의 경우 계획했던 수준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자금유통의 차질이 생긴.

⑤ 저소득층에게 가계부채는 생계에 큰 부담

- 생계부담 :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경우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이 생계에 주는 부담이 매우 높고, 고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느낌
 - 저소득층 : 원리금 상환으로 생계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중이 84.4%
 - 중·고소득층 : 원리금 상환으로 생계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중이 중소득층은 72.2%, 고소득층은 58.1%
 - 저소득층의 경우 '가처분소득 감소 → 생활비 마련을 위한 가계부채 확대 → 생계부담 가중'의 악순환 야기

- 상환가능성 : 저소득층의 과반 이상이 대출기한 내 상환이 불가능
 - 저소득층 : 가계부채 상환이 불가능한 저소득층의 비중이 20.0%, 대출 기한 경과 후 상환가능 한 가구가 32.4%로 부채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
 - 중소득층 : 가계부채 상환이 불가능한 가구는 7.5%, 대출 기한 경과 후 상환가능 한 가구가 31.9% 수준
 - 고소득층 : 가계부채 상환이 불가능한 가구는 3.2%, 대출 기한 경과 후 상환가능 한 가구가 32.7%로 상대적으로 상환가능성이 높음
 - 특히 저소득층은 소득감소에 따라 생활비마련을 위한 부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에 큰 생계부담을 느끼고, 부채의 악순환으로 대출기한 내 상환 어려운 상황

< 소득계층별 가계부채 생계부담(2013년) > < 소득계층별 상환가능성(2013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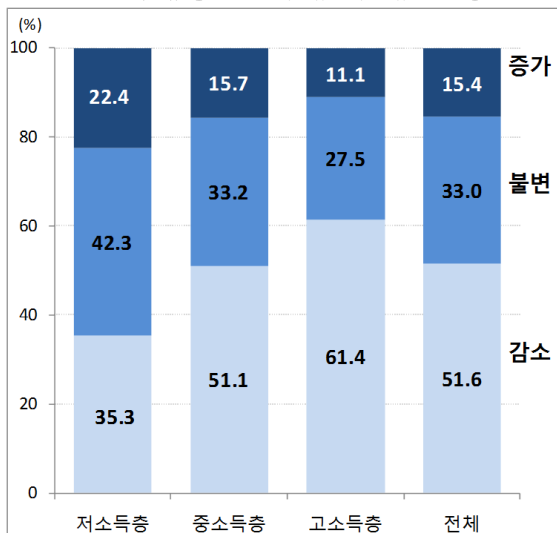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주 : (좌측 그래프) '부담 없음' 비중은 저소득층 15.6%, 중소득층 27.8%, 고소득층 41.9%임.

⑥ 고소득층은 부동산 구입, 저소득층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부채증가

- 미래 가계부채 변화 전망 : 가계부채가 감소될 것이라고 믿는 가구가 많고, 특히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축소될 전망
 - 저소득층 : 35.3%는 부채규모가 감소되고, 22.4%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
 - 중소득층 : 51.1%는 부채규모가 감소되고, 15.7%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
 - 고소득층 : 61.4%는 부채규모가 감소되고, 11.1%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
 - 저소득층의 경우, 64.7%가 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부채규모가 증가 혹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증가 22.4%, 불변 42.3%)
- 미래 부채 증가 요인 : 저소득층은 생활비로 인해, 고소득층은 부동산 구입을 위해 금융대출이 확대될 전망
 - 저소득층 : 향후 1년간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생활비(52.1%)¹⁰⁾와 교육비(26.1%)를 위한 '생계형 대출'이 대부분
 - 중소득층 : 생활비(37.3%)와 교육비(21.3%)를 위한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중소득층도 '생계형 대출' 비중이 상당히 높음
 - 고소득층 : 부동산 구입을 위해 대출하겠다는 응답이 35.2%에 달하고, 사업자금마련 요인도 13.5%로 '투자형 대출'이 대부분
 - 저소득층의 경우,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해 생계형 대출이 지속되고 있음

< 소득계층별 미래 부채 전망 >



< 소득계층별 미래 부채 증가 요인 >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부동산 구입	5.1	15.2	35.2	16.9
사업자금	3.7	9.2	13.5	8.9
생활비	52.1	37.3	15.6	36.3
교육비	26.1	21.3	15.4	21.2
부채상환	9.0	11.0	7.1	9.9
기타	4.0	5.9	13.3	6.9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주1 : (우측 표)미래 1년간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비중 산출.
 주2 : (우측 표)생활비는 의료비, 전·월세보증금 등 포함.

10) 생활비 40.6%, 의료비 5.9%, 전·월세보증금 5.6%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3. 시사점

-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은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계형 대출'이 확대되고, 고소득층은 부동산 구입 및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형 대출'이 확대
 - 저소득층 :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생활비 마련 및 부채상환을 위한 '생계형 대출'이 확대
 -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이 감소하고 있어, 부채에 더욱 의존하고 이자비용이 가중되는 악순환 초래
 - 안정적 일자리 부재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고,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공적이전소득이 감소하고 있어 부채 의존도 확대
 - 중소득층 : 자영업자의 경우 수익성 저하, 임금근로자의 근로불안 등으로 '생계형 대출'이 중소득층으로도 확대
 - 준비없이 자영업을 창업하게 됨에 따라 업태선정 및 경영노하우가 부족하여 폐업으로 연결되고, 임금근로자의 경우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이 확대되는 추세
 - 전세가격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전세자금마련을 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의존도가 증가
 - 고소득층 : 채무상환부담이 다소 완화되고, 부동산구입 및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형 대출'이 확대
 - 원금상환을 통해 부채규모를 축소하는 고소득층 비중이 높아 채무상환부담은 다소 완화
 - 그러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채규모를 증대하려는 고소득층 가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

○ 소득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 마련

- 저소득층 : 3각축 대책(소득향상, 서민금융,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마련
 -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직업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11) 직업훈련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로 이동 유도
 - 공공근로사업이나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대폭 확충하여 저소득층이 근로소득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공적이전지출을 확대하여 사회안전망 조성
 - 높은 대출 문턱을 넘기 어려워 고금리 대부업체에 의존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서민금융 지원 확대
 - 채무불이행 저소득층에 대한 채무 감면 대책과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자립 기반 마련 및 생활안정 도모

- 중소득층 : 소득향상 대책과 채무건전성 강화 필요
 - 창업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대출에 의존하는 중소득층이 창업 후 수익성 열악으로 폐업하게 되고,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남
 - 비은행권 및 카드빚, 고금리의 대부업체에 의존하는 중소득층을 저리의 제1금융권으로 이전하는 정책이 필요
 - 사교육비와 의료비, 주거비 부담 완화대책 등을 통해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

- 고소득층 : 부채부담은 축소되지만,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대출은 서서히 줄일 필요가 있음
 - 부채에 의존한 과도한 부동산 투자 및 사업자금 마련을 억제
 -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사업자금 마련 및 고위험자산 투자 등의 투기적 대출을 억제

김광석 선임연구원 (02-2072-6215, gskim@hri.co.kr)

11)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31.7%는 가구주가 무직 상태에 있음.

[별첨] 소득계층별 금융대출가구의 자산·부채·소득 구조

< 소득계층별 금융대출가구의 자산·부채 구조 >

(만원, %)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총자산	12,155	13,518	25,296	25,958	69,234	66,279	35,299	34,718
저축액	1,326	1,692	4,138	4,551	12,331	12,559	5,956	6,236
총부채	3,229	4,479	5,909	6,323	15,663	16,358	8,161	8,679
금융대출잔액	2,578	3,667	4,501	4,832	11,441	11,970	6,101	6,528
순자산	8,926	9,039	19,387	19,635	53,571	49,921	27,139	26,039
가처분소득	934	884	3,003	3,170	7,370	7,634	3,898	4,013
원리금상환액	398	500	771	891	1,738	2,002	980	1,126
이자지급	129	186	238	244	607	584	322	325
원금상환	268	314	533	646	1,131	1,418	658	801
원리금상환액/가처분소득(%)	42.6	56.6	25.7	28.1	23.6	26.2	25.1	28.0
금융대출잔액/가처분소득(%)	276.0	414.8	149.9	152.4	155.2	156.8	156.5	162.7
총부채/총자산(%)	26.6	33.1	23.4	24.4	22.6	24.7	23.1	25.0
금융대출/저축액(%)	194.5	216.7	108.8	106.2	92.8	95.3	102.4	104.7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주 : 총자산 = 저축액(주식채권포함) + 현거주지 전월세보증금 + 실물자산(부동산 포함).
 총부채 = 금융대출잔액 + 갯잔후 불입금액 + 임대보증금.

< 소득계층별 금융대출가구의 소득 구조 >

(만원)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근로소득	651	664	2,470	2,742	5,653	5,993	3,081	3,298
사업소득	224	284	1,004	976	2,957	3,014	1,423	1,410
재산소득	27	29	85	88	506	543	189	198
이전소득	283	253	167	162	179	190	185	182
공적이전소득	177	172	123	117	135	148	133	133
사적이전소득	105	81	44	45	44	42	52	49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8	3.7	1.2	2.8	0.1	1.9	1.1	2.5	4.1	3.2	2.8
유로 지역	-0.6	-0.1	-0.3	-0.1	-0.5	-0.4	-0.2	0.3	0.1	-	1.0
일본	2.0	3.5	-2.0	-3.2	0.6	1.7	4.5	3.6	1.1	-	1.7
중국	7.7	8.1	7.6	7.4	7.9	7.7	7.7	7.5	7.8	7.7	7.5

주 1) 2013년, 2014년 전망치*는 IMF 2014년 1월 전망 기준.

2) 미국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 지역, 일본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2월 6일	2월 13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70	2.46	3.03	2.70	2.73	0.03%p
	엔/달러	85.86	98.51	105.04	101.53	102.51	0.98¥
	달러/유로	1.3222	1.3031	1.3799	1.3531	1.3594	0.0063\$
	다우존스지수(p)	12,938	14,910	16,577	15,629	16,028	399p
	닛케이지수(p)	10,395	13,677	16,291	14,155	14,535	380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2.82	2.88	2.86	2.85	2.84	-0.01%p
	원/달러(원)	1,070.6	1,142.0	1,055.4	1,079.0	1,066.4	-12.6원
	코스피지수(p)	1,997.1	1,863.3	2,011.3	1,907.9	1,927.0	19.1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2월 6일	2월 13일		
국제 유가	WTI	90.89	96.52	98.55	97.83	100.30	2.47\$
	Dubai	107.99	100.38	107.88	102.58	104.81	2.23\$
CRB선물지수	294.78	275.62	280.17	287.84	293.21	5.37\$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2014(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7	2.6	1.5	2.0	1.9	3.6	2.8	3.8
	민간소비 (%)	2.4	1.2	2.2	1.7	1.6	2.1	1.9	2.7
	건설투자 (%)	-4.7	-1.9	-2.4	-2.2	5.2	8.3	6.9	2.5
	설비투자 (%)	3.6	2.3	-6.1	-1.9	-8.2	5.7	-1.5	6.7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261	163	317	481	298	410	707	490
	무역수지 (억 달러)	308	109	174	283	200	241	441	370
	수출 (억 달러)	5,552	2,750	2,729	5,479	2,765	2,832	5,596	6,067
	(증가율, %)	19.0	0.5	-3.1	-1.3	0.5	3.8	2.1	8.4
	수입 (억 달러)	5,244	2,641	2,555	5,196	2,565	2,591	5,156	5,697
	(증가율, %)	23.3	2.3	-4.0	-0.9	-2.9	1.4	-0.8	10.5
소비자물가 (평균, %)	4.0	2.7	1.7	2.2	1.4	1.2	1.3	2.4	
실업률 (평균, %)	3.4	3.5	2.9	3.2	3.4	2.9	3.1	3.1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8	1,142	1,112	1,127	1,104	1,086	1,095	1,07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